

정부, 에너지 이용합리화 적극 추진

기후변화대책 일환으로 사용감축 적극화 ... 자동차연비 5등급 단일화

자동차 연비제도를 현행 8개군에서 단일군 제도로 바꾸고 원자력 발전 확대 여부를 상반기에 결정하는 등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또 입지와 환경, 세제 등 모든 정부기관에 걸친 기업규제 가운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종합적 개편안이 5월 말까지 마련된다.

사황이 걸린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투자자원을 국민연금기금 외에 군인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KIC) 자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3월17일 구미 산업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연구·개발(R&D)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규제개혁, 기후변화와 자원확보 대책 등을 담은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변화대책 차원에서 지경부는 2008년 앞으로 10년간 에너지 절약목표와 과제를 담은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책의 일환으로 지경부는 현재 자동차 크기에 따라 8개군으로 나누어 군별로 5등급씩 모두 40개로 이루어진 효율등급체제를 8월부터 단일군으로 통합해 5개 등급 체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5등급 외에 별도로 설정된 경차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에너지효율등급은 모두 6개가 된다.

또 9월에는 사무실과 건물, 각종 행사에서 탄소발생을 없애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탄소발생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는 한편, 탄소발생량 감축을 위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적정 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안을 6월까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자원개발에서는 2012년까지 각각 18.1%, 32%로 설정된 원유·가스 자주개발률과 유연탄, 철 등 6대 광종 자주개발률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 투자계약이 이루어진 국민연금 외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자금을 생산광구 매입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와 같은 입지규제를 비롯한 환경·세제·노사관계 등 지경부의 업무소관이 아닌 분야까지 전영역의 규제를 찾고 대안을 만들어 현재 세계 30위권(세계은행 평가)인 기업환경을 10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발굴된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망라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상정해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장을 돌면서 법률상 규제는 물론, 숨겨진 규제까지 찾아내 고치겠다는 게 지경부의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중심으로 형성된 전국 16개 클러스터별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여 생산성을 2012년까지 현재 대기업의 33.1%(2005년)에서 60%대까지 끌어올리는 <이노베이트 코리아>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과 함께 출자하는 <신성장동력펀드>와 <기업벤처캐피탈>을 2012년까지 각각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술금융 공급규모를 2008년 3조1000억원에서 2012년에는 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7>